

시론

할 수 있는 10년이란 긴 시간을 농민들의 전국규모 시위와 정부와의 협상이 반복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 결국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휩싸였고 외국에서 우리의 공산품에 대한 보복위협이 예견되고 있다. 어렵더라도, 다소 정치적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대비하고 설득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우리가 또 다시 잊고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살아온 탓일 것이다.

금년 초 당초 계획에 따라 2004년도 쌀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화조치로 전환되기에 앞서 취해진 정부의 『쌀 수매가 인하』가 최근 우리 사회에 태풍의 눈으로 엄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쌀 소비량의 4% 정도 수입되었던 외국산 쌀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쌀 음료수나 쌀과자·쌀라면 등 가공식품으로 제조되어 사실 국내 쌀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4년이면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농림부가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WTO의 도하개발협정(DDA)에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외국산 쌀은 일정율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량에 제한 없이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의 쌀 생산단가는 얼마인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중국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국내산과 비교할 때 맛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가격은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화 유예조치 조항의 기한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입쌀에 대한 관

세는 어림잡아 500% 정도 부과해야만이 국내산 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에 대해 관세를 400%~500%를 부과한다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다른 상품에 대해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경제는 괜찮을까?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쌀농가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 현실에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을 두려워 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잃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따라서 이제 세계화와 병행하여 지방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신속성있게 대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 of Brand)을 널리 알려 분명한 비교우위 영역을 가져야 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모토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자치단체가 경쟁의 주체로서 적자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다.

21세기 초 WTO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체제에 도입하였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특히 사이버마켓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계경제는 이제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최고의 상품만이 세계를 제패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